

전북연구원, 생애영농 위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제안

개별 영농의 장점 살리면서 경영은 통합 작부·작업 아우르는 ‘따로 같이’ 전략 제시

농촌의 고령화 심화와 부재 지주(不在地主) 증가 등 문제에 대응하여, 농촌마을의 농지 이용을 조직화하고 다수 고령 농업인이 참여하여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정책’을 담당해 나가자는 정책이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은 정책브리프 69호를 통해 ‘농촌마을 생애영농(生涯營農)을 위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농촌마을 내 농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다기작(多期作) 작부체계로 농업경영을 효율화하고, 고령농 등의 영농 참여 여건을 만들어 농촌마을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마을단위 통합경영 조직’이다.

구체적으로 농촌마을 수준에서 작부계획·자재구매·농작업·출하 등 농업경영 기능을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법인)가 통합·조정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농지의 통합적 관리를 바탕으로 고령농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농 가능 생애기간 동안 경작(농업경영)을 마을영농으로 묶어내는 조직을 육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농가로부터 농지를 임대받아 경작·영농을 하고 임대료를 제공하며, 농업경영 수익 중 일부를 추가로 일정 수준에서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구조이다.

이점에서 농지소유와 농업경영을 통합하는 ‘법인 농업경영체’와 구별된다.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임대차로 확보한 농지에 맞춰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 작부체계(2기작, 소득작물 등)를 갖춰 영농계획을 세워 경작하고 수익을 올리되, 수익은 ‘임대료 지불, 법인 내 내부 적립, 지역사회 환원’ 등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농지를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에 직접 임대하지 않는 농가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자경

농가는 농작업을 위탁하거나 농자재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작부계획(2기작)에 참여하여 생산 방식의 이점을 공유할 수 있다.

결국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임차·위탁·자가 농업경영이 병행되는 복합형 경영체로 ‘전체와 개인’의 농업경영 통합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무엇보다 고령농에게는 농지 임대소득 보장과 농작업 참여에 따른 성과보상, 예비·생활농가의 일자리 제공, 마을공



▲ 정책브리프 69호 농촌마을 생애영농을 위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정책 제안

동급식·돌봄 등으로 농촌마을 공동체 활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농지 집적과 농업경영 효율에 초점을 두는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준비기, 구축기, 안정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과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가 다수인 농촌마을 현실에서 농지 집적화와 전문적 농업경영 방식에서 소외된 고령농이 생애영농을 해나갈 수 있는 방식의 문제해결형 정책기획이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시범사업을 도입해 효과를 확인하고 모델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청양군, 최초 논 범용화 용수 공급체계 구축

장평·청남면 일원 677.6ha 대상 발주 예정

청양군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청남지구 논 범용화 용수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시행 계획이 지난 14일 충청남도 고시(제2026-427호)를 통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해 원예작물의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청양군 장평면과 청남면 일원의 10개 리이며, 총사업비는 472억 400만 원이다. 재원은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구성되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1년까지다.

주요 사업 내용은 양수장 및 정수·가압장 1개소 설치와 급수관로 113조, 총연장 59.6km 구축

으로, 이를 통해 총 677.6ha의 농경지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논 중심의 기존 용수 공급 체계를 다양한 작물 재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원예작물 재배 여건을 향상하고 농업용수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안정적인 영농 기반 조성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과 소

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시행 계획 승인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1월 사업 발주를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홍열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이 기자
midal0210@naver.com



▲ ‘청남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위치도

진주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 대책’ 추진

도로변·생활권 주변 피해목 우선 제거

진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피해 고사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목의 신속한 제거와 지역별 맞춤형 방제를 강화하고, 수종 전환과 조림·숲 가꾸기 사업을 연계해 건강한 산림으로 회복시킬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50ha에 걸쳐 수종 전환 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조림 수종은 산주의 선호와 대상지의 생육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피해목 처리 방법도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한다.

방제기준에 적합한 파쇄·수집 등의 처리방식을 확대하고, 대규모 피해지역의 별제목은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Bio-mass)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처리비용을 줄이고,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목도 우선 처리한다.

또한 피해가 반복되거나 집단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수종 전환과 조림·숲 가꾸기 사업을 연계해 건강한 산림으로 회복시킬 예정이다.

피해목 제거 방법도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한다.

방제기준에 적합한 파쇄·수집 등의 처리방식을 확대하고, 대규모 피해지역의 별제목은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Bio-mass)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처리비용을 줄이고,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피해목 처리 방법도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한다.

방제기준에 적합한 파쇄·수집 등의 처리방식을 확대하고, 대규모 피해지역의 별제목은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Bio-mass)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처리비용을 줄이고,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 진주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 대책’ 추진

현장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벌목 인력 8명과 집제 인력 22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산림 재난 대응단을 운영한다.

대응단은 산림병해충 예방과 피해목 조사·방제, 생활권 주변 위험 목 제거 등을 수행하며, 드론과 지상 예찰을 병행해 추가 발생 목과 누락 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전환경농업 단지, 양봉장, 주거지와 수계 인접 지역 등 약제살포에 민감한 지역은 사전 현장 조사와 관계자 협의를 거쳐 방제할 계획이다.

약제살포가 어려운 곳은 피해목 제거를 우선 추진하고, 보존이 필요한 주요 소나무림은 정밀 예찰과 예방 사업을 추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조경수 생산업체, 임업후계자 및 관계기관에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라 방제 대책을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읍면동에서 산주와의 협의와 사업 안내를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피해 의심목 신고와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방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방제 대책을 추진해 피해목을 제거하고, 예방 관리도 강화할 것이다”라면서 “수종 전환과 산림사업을 연계한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의 건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봉화군, 사과 다축과원 ‘거점’으로 우뚝

사과산업 대전환의 ‘선구자’ 역할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과수산업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봉화군이 미래형 사과 평면과원(다축·이축·고밀식)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사과 다축재배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봉화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노동력을 줄이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성과 작업 효율을 함께 끌어올리는 평면과원 조성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 평면과원에서는 전정·적과·방제·수확 작업이 단순해진다.

봉화군은 2020년 미래형 2축형 밀식과원 0.9ha(3농가)로 첫발을 내디딘 뒤 시범사업으로 지역에 맞는 재배기술을 실증했다. 이후



▲ 사과_픽사베이

꾸준한 기술 보급과 정책 지원으로 조성 규모를 넓혀, 2026년까지 총 92.3ha(195농가)의 평면과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사업비 약 22억 원을 투입해 신규 평면과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가 알려지면서 봉화군은 사과 다축재배의 본보기로 자리 잡고 있다. 전국 사과 주산지의 농업 관계자와 작목반, 농업인 단체들이 평면과원의 조성부터 관리까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봉화군 선도농가를 잇달아 찾고 있다.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다축과원 조성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과원이 일직 자리 잡도록 사후 기술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41(방배동 1002-6) | 02-3470-8100 | www.kfia.or.kr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포일동 660-4) | 02-3470-8200 | www.kafri.or.kr

